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ITC, SGS Thomson/현대전자(주)와 관련한 337조 케이스를 재심 않기로 결정

ITC, SGS Thomson현대전자 현대전자 아메리카사의 337조 케이스(IC (Dram & Sram))와 관련하여 예비판정과 공공 논평 (public Comments) 기회 제공후 본 케이스의 종결을 재심않기로 결정.

2. 미 전자협회 (AEA), 일본이 구조조정 공약을 준수토록 미 상무부에 모니터링 요청

미 전자협회는 Linn Williams USTR 부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구조조정 공약에 관한 일본내 여론을 조성하기전 공약 시행으로 미국 업체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메커니즘을 추진토록 요청. 본 서안에서 AEA는 특히 미국 전자산업과 관련된 이권 및 관심사안을 제기했음.

SII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에 관한 AEA의 구체적인 목표는 하기와 같음.

○일본의 배타적 사업관행의 종식을 위해 일본의 새로운 법규정에 대한 미국 업계의 재검토 및 논평

○사적권리(private right) 조치가용이토록 일본의 조치의 명확화 및 모니터링

○신입 특허 조사관이 몇명이나 고용되며 어디에 근무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특허 계류

(patent pendency)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키 위해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상세한 정보.

○AEA 회원업체가 경험, 확인하였듯이 6개월간 SII에 대한 재검토시까지 통관 수속을 24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향후 2-3년 동안 착수할 일본의 Infrastructure 프로젝트와 전자업체의 잠재력 정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

AEA는 또한 정부의 컴퓨터 조달, 기업의 조달관행,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기타 양상을 포함 SII에서 충분히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미 행정부와 계속하여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

3. 의회 무역 위원회의 실무 담당자,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의회 지지 획득에 제조업이 관건이라고 언급.

미 무역사안을 관장하는 핵심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의 의회 실무 담당자는 9월 7일 의회의 무역사안에 관해 미 재계에 브리핑했음.

최근 제네바에서 귀국한 이 실무 담당자는 미 제조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체결을 위해 미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와같은 언급은 새로운 사안인 서비스, 지적 소유권, 외국인 투자 부문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의 이익이 "상쇄될" 위험에 직면할 것 이라는 전반적인 견해에 기인함.

실무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미 제조업 대표들은 토론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협상 결과가 유익한지에 대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비관세 장벽의 양허를 포함한 시장 접근 협상은 미국 제조업자들이 이 협상 결과의 지지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실무 담당자들은 확신하고 있음. 정부조달은 미국 제조업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실무 담당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또다른 분야임.

현재 대부분의 미 의회의원들은 다자간 무역협상(MTN)에 “무지, 무관심, 혹은 적대시”하고 있음. 이같은 부정적인 현상은 로이드 벤슨 상원 재무 위원회 의장이 위원회 위원들과 칼라 힐즈 USTR 대표를 위해 여러번의 개별회의를 갖을 예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것임.

위원회 실무 담당자는 또한 금년 가을에 시작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해 정기적인 회동을 계획하고 있음.

힐즈 USTR 대표와 상원 재무 위원회가 협의할 사안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어떻게 한정된 제시간에 종결 짓느냐와 본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음.

관세, 서비스,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전반적인 협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결 짓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임. 그러나 의회는 차후에 상세히 구체화된 몇몇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안(framework arrangements)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 한편으로는, 일부 산업들은 미국이 어떤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양보한 반면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교환 약속만을 받아냈다고 불평을 할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으로는, 업계가 지지를 하나 확실한 이익을 제공치 못하는 기본 협정안에 대해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 모으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4. 세마테크, 고도의 칩 개발 계획 발표

미 반도체 콘소시엄인 세마테크는 8월24일 세마테크 전문가들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한 0.5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다음 단계는 0.5 마이크로 디바이스 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있음. 현재, 0.8 마이크로 회로 소자 (Circuitry)가 최신임.

0.5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동 크기의 칩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2.5배를 저장할 수 있음.

세마테크의 주요 목적은 미국산업의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생산 위한 미국의 장비 사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일본은 또한 0.5 마이크로 회로 소자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세마테크는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약 하는 세마테크 14개 회원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5. 이코노미스트지의 한국 서베이

1990. 8. 19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무역 및 조세정책 등 3가지 요인을 해결 해야 함.

경제정책은 갑작스런 경제팀의 경질과 정부개입의 확대 전환으로 예측 불허함.

무역에 관해서는, 한국은 공급국으로서 미국과 일본 시장에 지나치게 계속해 의존하고 있으며 EC 시장 개발에는 실패했음.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간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유럽, 미국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략적인 동맹을 형성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의 조세정책은 소득 격차를 야기 시키고 농민에게는 상처를 안겨 주었음. 이 세가지 요소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시켰고 정부의 활동영역을 제한시켰음.

한국 업계와 정부의 엄격한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 정확히 말해서 한국정부와 업계는 지휘 (command) 경제정책에서 정치적인 요소로 정부개입을 제안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음.

한국 정부는 민주정치 풍토속에서 권력을 적게 행사해야만 했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패배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재벌은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정부가 고안한 개혁(예, 가명 주식 보유 폐지)을 성공적으로 저지시켰음.

재벌은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점점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정부처럼, 재벌도 조정문제에 직면했음.

한국의 대기업체가 앓고 있는 단점은 아래와 같음.

- 관료주의와 중앙집권적인 경직된 운영
- 전략적인 유대관계 없이 수많은 개별 산업이 관여
- R & D 투자부족과 계급적인 기업문화로 기술혁신 부족

대기업의 원동력은 노동력, 신속한 조치와 리스트 부담, 재력 등임.

무역정책 견지에서 볼때, 본 기사가 초점을 둔 가장 당황시키는 점은 긴축과 함께 한국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으로의 전환임.

본 기사는 분명히 한국 정부가 수입규제 의도로 사치성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세무감사 실시 위협과 같은 “수입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배후자로서 언급했음.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에 대한 관심은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령, 인플레이 상승과 가열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원화를 절하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언급을 예 들고 있음.

우루가이 라운드가 일단 종결되면 한·미간의 유대관계에 전조가 되지는 않지만 현행 한국의 정책은 미국 보다는 오히려 부상하고 있는 EC와의 유대관계에 많은 손실을 주게 될 것임.

한·미간의 유대관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기존의 한국 경제팀의 조치 즉, 미국과의 시장개방 협정, 계속되고 있는 우호적인 대화 채널의 확립에 주로 기인함.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미국 관리들은 EC대사들이 함께 박 필수 상공부 장관에게 수입금지 캠페인에 항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시해 왔음.

EC는 한국이 미국 업체에 소급해서 부여한 지적 소유권 (IPR) 보호의 후보국이 되고 있으나 한국은 지적 소유권 보호에서 EC업체를 배제하고 있음.

한국과 EC와의 관계는 한국이 시장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EC가 시장 단일화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함.

마찬가지로 EC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실제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EC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비차별주의, 다자간 무역 정책을 고수토록 힘을 가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임.

전자제품은 특히 민감한 분야임. 기 보고했듯이 EC는 이 지역의 공식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기관인 Jessi가 미국의 세마테크와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극동국가의 경쟁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EC 시장 자체를 제외하고, 한국은 또한 공산국가와의 전략적인 견지에서 볼때 EC와의 유대관계도 추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본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공산국가들을 한국의 무역 다변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EC 특히, 독일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질 것임. 동유럽에 까지 확대될 유럽 경제 스페이스 (European Economic Space) 회담이 있음.

한국 기업들은 이와같은 유럽 경제권 조정에서 배제되는 리스크를 안거나 혹은 원산지 규정 등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임.